

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같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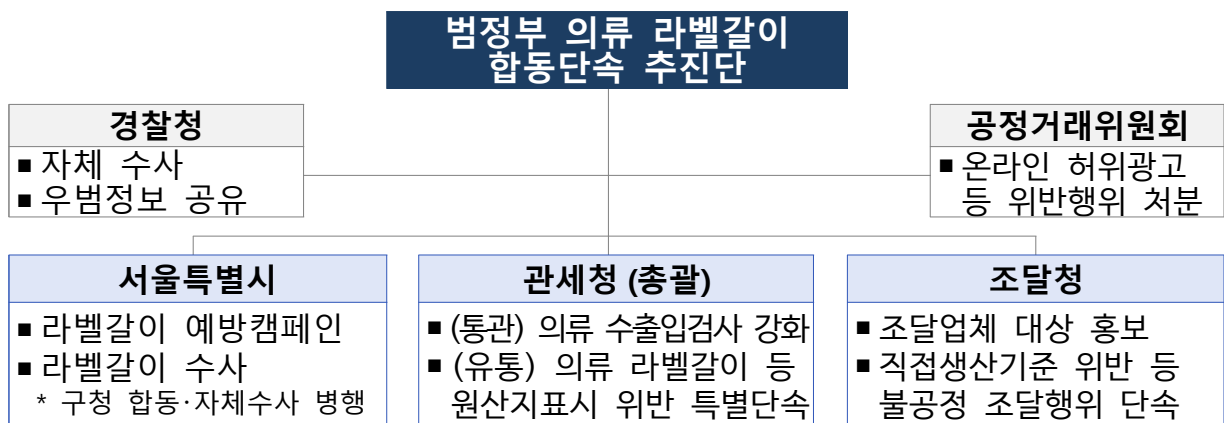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193개 업체·416억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로 국내 생산기반 및 K-패션 브랜드 가치 보호
- 국회와 협력하여 대외무역법 개정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같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의류 라벨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6. 7. 9.목 13:30, 국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부처, 생산자단체 등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이른바 ‘라벨같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 특화 제조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업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되었다.

* 출처: 2025년 국내 의류제조업 실태조사('25.12, 한국패션협회)

관세청은 통관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류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하였다.

* 특별단속 100일간 통관검사 비율 10% 상향

〈※ 참고: 관세청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 '22년 | | '23년 | | '24년 | | '25년 | |
|------|------|-----|------|----|------|----|------|----|
|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 통관단계 | 437 | 19 | 461 | 14 | 517 | 14 | 612 | 21 |
| 유통단계 | 21 | 121 | 11 | 13 | 35 | 61 | 15 | 27 |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시작 첫날 국회,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서울시 창신동 봉제골목 및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하였으며, 초기 3주간(2월 9일 ~ 3월 1일)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받아 단속에 활용하였다.

* 특별단속기간 동안 총 21건의 의류 라벨갈이 관련 제보 접수(13건 적발)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특히,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며,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병과 가능)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의류·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 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 (적발금액 기준)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 ※ 참고: '19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특별단속 】

- 중기부 주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 특별단속('19.8.~'19.10.)
⇒ 71개 업체, 150억원 상당 적발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적발사례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 책임자 | 과장 | 윤지혜 (042-481-788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순 (042-481-7742) |
| 담당 부서 | 관세청 조사총괄과 | 책임자 | 과장 | 최문기 (042-481-7740) |
| | | 담당자 | 서기관 | 전두한 (042-481-7818) |
| 담당 부서 | 관세청 통관검사과 | 책임자 | 과장 | 박시원 (042-481-7830) |
| | | 담당자 | 사무관 | 오경은 (042-481-7923) |
|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 | 책임자 | 팀장 | 이영희 (044-200-4750) |
| | | 담당자 | 조사관 | 이영수 (044-200-4755) |
| 담당 부서 |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 책임자 | 과장 | 김정은 (042-724-7174)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근택 (042-724-7503) |
| 담당 부서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책임자 | 총경 | 김현수 (02-3150-2037) |
| | | 담당자 | 경정 | 진우경 (02-3150-2168)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수사과 | 책임자 | 과장 | 강희은 (02-2133-8805) |
| | | 담당자 | 팀장 | 전혁 (02-2133-8870) |



□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사례**

| ① 근무용 단체복 | ② 민방위복 | ③ 특수복(예시) |
|---|---|---|
|  |  |  |
| <p>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 원산지 이중표시(1억5천만원)</p> | <p>지자체 납품 민방위복 원산지표시 제거(1천6백만원)</p> | <p>공공기관 납품 화학물질보호복 국산 라벨갈이(36억원)</p> |

* 사례③은 관세청-조달청 합동 현장 단속건

□ **백화점,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사례**

| ④ 티셔츠 | ⑤ 여성의류 | ⑥ 머플러 |
|---|---|---|
|  |  |  |
| <p>온라인 쇼핑몰 판매 티셔츠 원산지 미표시(3백만원)</p> | <p>백화점 판매 여성의류 국산 라벨갈이(1억8천만원)</p> | <p>복합쇼핑몰 판매 머플러 원산지표시 손상(4천8백만원)</p> |

□ **어린이용 제품,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의 위반 사례**

| ⑦ 방수 가운 | ⑧ 속옷 | ⑨ 가방 |
|---|---|---|
|  |  |  |
| <p>어린이용 미술 가운 원산지 미표시(315점)</p> | <p>여성용 속옷 원산지표시 제거(888점)</p> | <p>가죽 핸드백 원산지 미표시(24,361점, 1억원)</p> |

* 사례⑧은 관세청-서울시 합동 현장 단속건

□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사례**

- **외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수출(2개사, 237억원)**

※ 사진은 참고용으로 보도시 상표나 업체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